

5·18 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성폭행 피해자 포함

유족범위 사실혼 배우자까지 확대 관련자에 수배·연행·구금자 추가 기념재단 지원 법적 토대 마련 여야 '5·18보상법 개정안' 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에 성폭행 피해자가 포함되고, 유족의 범위도 기존 민법상

재산상속인에서 사실혼 배우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5·18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가 5·18기념재단의 사업비 등을 출연·지원하는 법적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긴급 법안소위를 열고 '5·18보상법 개정안' 세부 검토 내용을 살펴본 뒤 여야 합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 소위는 "5월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보상법이 빛을 볼 가능성도 커졌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5건, 송재호 의원 1건, 오영환 의원 1건 등 총 7건이 발의됐고, 일부 내용이 겹치거나 상충돼 이날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성폭행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관련자에 추가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도 5·18특별법 상의 정의인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로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또 5·18기념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지원금지자라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

나 형사보상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5·18 관련자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하도록 특별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이형석 의원은 이날 기타 상이 1·2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5·18 관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기타"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행안부 등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5·18 진실 규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2030 코인민심' 어쩌나... '은성수 난' 거리두기 속 고심

가상화폐 대책 마련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 방향성을 놓고는 내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26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점검해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가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기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이처럼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이유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20~30대를 중심으로 '코인 민심'이 무섭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등 돌린 2030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본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오영환 비대위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성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이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차단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낸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큰 틀의 방향에선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각론을 두고는 시름이 깊다. 우선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가면 악화된 코인 민심이 폭발, 자칫 내년 대선에 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큰 등락 폭으로 '코인 개미' 피해가 속출하고 투기 세력이 판을 치도록 둔다면 더 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규제 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전남도 공문서에서 일제잔재 용어 사라진다

도의회 '국어 진흥 조례' 개정안 통과

전남도 공문서에서 일제 잔재 행정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 국어 진흥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민호 의원(순천6)이 일제 잔재 용어 순화해 위해 발의한 '전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전남도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공문서나 행정용어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제 잔재 용어는 대일항쟁기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일본식 한자어인 '공란(空欄)'은 '빈칸'으로, '지불(支拂)'은 '지급'으로, '절취선(截取線)'은 '자르는 선' 등으로 순화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야 '윤여정 오스카 상 수상은 한국 영화사 쾌거'

여야는 26일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상을 수상하자 '한국 영화사의 쾌거'라며 일제히 축하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에 단 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윤여정 배우와 출연진, 제작진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 이후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또다시 썼다"면서 "막막하고 뜻밖했던 윤여정 배우의 연기는 세계 영화인에 큰 감동과 여운을 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102년 한국 영화사에 기억될 날"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극복의 에너지와 생기를 불어넣었다. 고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강은미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대표 발의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26일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기후정의법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출했다.

이 기후정의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국가의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영향평가와 탄소인자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국토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조항도 담았다.

강 의원은 "최근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이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회는 2030년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조속히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백신 부작용 선 긴급지원, 사후 확인제 시행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우선 긴급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한 후 사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라"며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 수급 관련 당정 협의에서 강도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

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2차관 등에게 이런 요구를 전달했다고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와 같이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련 규정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계약한 2천만 명분의 추가 화이자 백신은 3분기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을 전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노바백스·모더나·얀센 백신의 일부를 상반기 내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츠증권회사 임대 중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 사정상 급매, 15억 → 13억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윈윈~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중개환영. 010-3605-5000